



육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고병원성AI가 육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올해는 북경기마저 온데간데없고 원종계 및 종계의 과잉 입식으로 장기 불황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병원성 AI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양계산업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고병원성AI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 보았다.



이 흥 재
충남당진육계지부장

WHO에서도 철새를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도 발생 인근 및 기타 지역의 철새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철새라고 명확히 결론짓기 어려운 것이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중의 하나인 충남 서해안 인근(천수만, 대호만등)에서는 발생사례가 없고 내륙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1. 발생원인

정부에서는 철새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지만 아직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 외의 전파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이다.

1) 철새에 의한 전파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겨울철 철새의 이동 경로를 따라 세계적인 발생이 일어나고 있고

2) 사료원료 및 가금 산물에 의한 전파

현재 세계적으로 동남아가 발생이 빈번하고 인체감염사례까지 발견되는 등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서 AI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원료 및 가금 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명확한 발생원인 및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하나의 원인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3) AI백신의 영향

2003년 AI발생이후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이미 저병원성AI백신은 사용이 허용되었다. 백신 허용이후 고병원성이든 저병원성이든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위험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AI바이러스가 매우다양하고 빠른 변이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백신사용이 바이러스의 상존이라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발생에 대한 대책과 생산자의 역할

AI발생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인 대책과 소극적인 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극적 대책은 연례 발생을 기정사실화 하고 AI발생 이후 상황발생시마다 소비촉진 행사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대책(국민적 정서에 호소하여 소비를 확대시키는 등)을 들 수 있으며, 적극적인 대책은 AI가 양계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난이라는 논리로 전 방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정부에서 농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대책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 **대 정부대책** : 국가적인 재난이라는 차원에서 정부는 발병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철새라면 환경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새의 유입을 막아야 하고 백신이 문제라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대 국민** :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이라면 우리가 생산한 닭고기를 소비하는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2003년 발생당시는 일시적인 닭고기 기피로 양계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AI가 발생하면 양계산물이 혐오식품으로 인식될 지경에 처했다. 닭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AI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닭고기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한다. 죽은 닭은 도계가 불가능하여 시판이 될 수 없고, 현재우리의 방역상황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③ **대 농가** : AI발생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 농가이다. 특히 육계산업이 계열화 사업으로 정리되면서 생산자에 대한 대책역시 계열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상의 문제도 2003년 당시 시가와 생산원가 등 말이 많았으나 금년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었다. 협회 등에서 발생이후 대책수립이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발생농장 주변



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다 보니 생산자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염지역의 신속한 살처분과 이동제한지역 내의 전량 수매 방법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긴급



경영자금의 지급 등 여러 대책을 메뉴얼화 하여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재난이나 방역에 관한 지원은 WTO나 FTA규정과도 상관이 없기에 이런 기회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④ **대 언론** : 가장 힘들고 중요한 부분이다. 30이라는 피해로 끝날 것을 언론의 보도만으로 100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2003년 AI발생으로 육계산업이 초토화 되었으나 국민의 성원으로 회복되고 안정기를 찾았다. 그러나 2005년 가을 국회에서 안명옥의원이 가상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했다. 세계적인 재앙으로 시작해서 유럽에서는 방독면을 몇 천만 개 준비했다는 등, 공기전파이기에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천만 명이 위험하다는 등 과장보도로 국민을 현혹했다. 그러나 우리는 몇몇이 나서서 대응했고 그나마도 응급조치 뿐이었다. 사전 정보력부족 등으로 일이 터지고 나서 대응 하는

‘사후 약방문식’의 대응은 피해의 예방이 아닌 축소일 뿐이다. 국민의 건강과 양계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대 업계** : AI가 발생하면 소비가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입추의 감축과 적극적인 소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 대책을 미루고 농가에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는 이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⑥ **생산자의 역할** : 생산자는 산업의 주인이다. 이제는 AI발생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메뉴얼이 필요하다. 2006년 우리 당진지부의 경계인 아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당시 군과 경찰 그리고 지부회원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방역활동을 전개하였다. 2003년 발생 당시에도 경험하였던 터라 회원의 반응도 적극적이어서 상황종료 시까지 방역초소를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군 방역팀장의 책

임아래 지부총무가 2인 1조의 근무편성과 근무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고 경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사고 없이 차단방역초소 운영을 마무리 하였다. 회원 농가에는 철저한 소독과 회원간의 접촉 및 발생지역의 부화장이나 도계장과의 관계를 자제하도록 홍보하여 군내 발생원인을 줄여나갔다. 2003년이나 2006년 모두 인근 아산과 천안에서 AI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진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회원의 노력으로 차단방역이 성공한 것이라 생각한다.

3. 결론

이러한 모든 것이 생산자 중심이 되어야 한

다. 대책의 주체인 정부는 언제나 예산과 법규를 내세워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키워왔다.

업계도 농가를 방패삼아 경영자금정도로 만족하려는 일은 그만 두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자도 반복되는 피해를 만성적으로 감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살처분을 거부하고 정책에 반하더라도 한번쯤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최대의 피해자는 생산농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발적인 방역활동과 확산 방지대책을 세워야한다. 생산자 중심의 전담 대책기구가 구성되어 행정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책요구의 중심이 되어야할 양계협회가 주도적이지 못하고 끌려 다녀서는 대책이 안된다. **양계**

♣ 완벽하게 소독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계사 청소대행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국내 최대 기기 보유

완벽한 소독

남두축산그린

휴대폰 : 011-573-8327

011-545-0643

팩 스 : 053-325-1556